

폐기물 재활용 정책방향

심 재 곤(환경부 폐기물자원국 국장)

1. 서 언

우리나라에서는 1960-70년대까지 폐기물 처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지는 않았다. 즉, 소득수준이 낮아 폐기물 발생량이 적었고, 농경위주의 사회로서 발생된 폐기물도 음식물쓰레기는 가축사료로 기타 폐기물도 연료나 비료 등으로 다시 이용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가 진전되고 소득수준도 향상됨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여건은 악화되었다. 즉, 산업화는 사업장폐기물의 증가를 초래하고, 도시화는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약화시켰다. 이와함께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소비증가와 함께 1회용품이나 포장재의 사용증가, 제품의 수명주기(Life Cycle) 단축은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었다.

폐기물의 처리가 환경문제의 중점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감량화」와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 및 「안전처리」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소각·매립을 억제하는 「자원순환형사회」 구축에 폐기물관리 정책의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

재활용의 효과는 사회 전체적으로 에너지등 천연자원을 절약하고, 쓰레기를 매립·소각하기 위한 시설투자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경제적인 효과와 함께 쓰레기 처리에 따른 환경안전상의 문제를 저감시킨다는 환경적인 효과로 대별할 수 있다. 과거에는 재활용의 경제적인 측면이 중요했다고 하면 최근에는 쓰레기의 매립·소각이 어려워짐에 따라 재활용으로 최종처리 대상 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활 폐기물은 대부분 매립에 의존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매립장 건설에 적합한 땅이 줄어들고 있으며, 남비현상에 의한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으로 매립지나 소각장을 건설하기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따라 재활용을 통하여 최종처리 하여야 할 폐기

물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가 된 것이다.

2.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량은 총량기준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연탄사용 감소 및 1995년의 쓰레기종량제 시행 등에 따라 1993년 1인당 1.5kg에서 1996년에는 1.11kg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은 산업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10% 이상의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1993년을 기점으로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이 생활쓰레기 발생량보다 많아졌다.

〈표 1〉 폐기물발생량 추이

(단위 : 톤/일)

구 분	1993	1994	1995	1996	증감율	
총 계	141,383	147,049	148,041	180,573	27.7	
생활폐기물 (1인1일발생량)	62,940 (1.5)	58,118 (1.3)	47,774 (1.1)	49,925 (1.11)	△20.7	
사업장 폐기물	소계	78,443	88,931	100,267	130,648	66.6
	일반	55,969	85,229	97,823	125,409	124.1
	지정	22,474	3,702	4,444	5,239	△76.7

주) '94.4.1 폐기물분류체계 변경으로오니류, 폐석고 등 지정폐기물중 80% 이상이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전환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종량제 실시에 따른 분리수거 활성화 등으로 재활용율이 1993년 11.5%에서 1996년 26.2%로 증가하였고 매립율이 1993년 86.2%에서 1996년에 68.3%로 하락하였다.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28.5%가 매립, 66.3%가 재활용되고 있다. 사업장 폐기물은 비교적 단일한 형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아 재활용율이 높으나, 상대적으로 불연성 폐기물이 많아 소각처리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사업장폐기물을 포함한 폐기물의 처리방법은 1996년의 경우 매립 38.9%, 소각 5.5%, 재활용 54.7%, 기타 0.9%를 보이고 있어 매립과 재활용의 비중이 높다.

〈표 2〉 폐기물 처리실태

(단위 : %)

구 분		1993	1994	1995	1996
생활 폐기물	재활용	11.5	15.4	23.7	26.2
	소각	2.4	3.5	4.0	5.5
	매립	86.2	81.1	72.3	68.3
사업장 일반폐기물	재활용	66.7	61.3	61.5	66.3
	소각	1.9	4.6	5.9	5.2
	매립	31.4	34.1	32.6	28.5

3. 폐기물 재활용의 현황 및 문제점

1993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우리나라의 생활폐기물 재활용율은 1992년 7.9%에서 1996년에는 26.2%로 높아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재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폐자원이 매립이나 소각되는 경우가 많다.

첫째, 재활용품의 수집·유통이 민간수집상 위주로 이루어져 폐지·고철등 경제성이 있는 품목은 비교적 활발히 재활용되고 있으나, 경제성이 미흡한 페플라스틱, 유리병·잠병류 등은 재활용율이 낮다. 이러한 품목은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로 처리되는 물량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재활용품 배출량이 증가하고, 지자체의 분리수거 장비와 시설 등도 확충되었으나, 아직까지 수거·선별, 압축이 단순 수작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고지대 단독주택 및 농어촌 지역 등은 분리수거 시설이 취약하여 재활용품 수거가 잘 안되며, 이물질이 섞이는 경우도 많다.

셋째, 폐자원의 수급조정 기능이 취약한 실정이다. 폐자원의 발생량은 비교적 일정하나 수요는 원자재의 국제시세 등 경제적 요인에 따라 크게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수급조정 기능이 취약하여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급등하고 수요가 적으면 적체되어 쓰레기로 버려지는 현상이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재활용업체가 대부분 소규모 영세기업으로 고부가가치의 재활용 기술개발이 어렵고 인력, 자금 및 부지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다. 현재 재활용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업체의 기반을 정착시키는 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다섯째, 재활용 가능여부는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에서 사용되는 재질의 선택 및 조립방법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가급적 재질이 단순하고, 쉽게 분해될 수 있어야 재활용이 용이해지나 아직까지는 재활용가능성보다는 소비자의 기호나 제품의 미관만을 고려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 재활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재활용 비용을 상승시키는 사례가 많다.

4. 재활용정책의 현황 및 발전방향

가, 재활용품 수거체계의 효율화

(1) 분리수거 체계의 정착

재활용이 활성화되기 위하여는 재활용품이 일반쓰레기에 섞이지 않고 별도로 배출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 당시 재활용품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배출하도록 하였다. 종량제봉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한 것이다. 이와함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 주거지역 단위로 분리수거함을 확충하는 등 분리배출체계를 구축하여 재활용품을 용이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체계정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재활용품의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지역별 주거형태, 도로사정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리수거 체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도시 단독주택은 일정시간대에 주민들로부터 직접 수거하는 대면수거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경우 맞벌이부부나 1인가구를 위하여 주유소, 공터 등에서 수거하는 거점수거를 병행 추진할 것이다. 공동주택은 부녀회, 자치회 등 주민조직에 의한 분리수거체계를 강화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 집하선별장, 민간단체에서 고철, 폐지 등을 유상수거 또는 재활용제품과 교환하는 체계도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한, 재활용품에 매립이나 소각대상 폐기물이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과 시·군·구 폐기물관리조례에 재활용품과 폐기물의 분리배출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복합재질 제품 등 분리배출이 안되는 포장재, 용기류 등의 사용억제를 위하여 포장재의 재질규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 재활용 기반시설의 확충

그동안 재활용품의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읍·면·동단

위의 재활용품 간이선별장(보관장)이나 시·군·구 단위의 집하선별장을 건설하고, 전용수집차량과 같은 장비와 인력을 확충하여 왔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시·군·구에서 집하선별장을 설치하여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있다.

〈표 3〉 지자체 분리수거관련 시설·장비 현황

구 분	'92	'96
- 분리수거용기(천조)	274	423
- 수거차량(대)	366	2,037
- 간이보관장(개소)	141	6,775
- 집하선별장(개소)	55	396

그러나 아직까지는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집하선별장의 시설이나 장비가 열악하여 재활용품의 수거·선별이 단순 수작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재활용 과정에서 인건비의 부담이 클 뿐 아니라 전반적인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집하선별장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현대식 자동선별기를 갖춘 집하선별장을 확충함으로써 재활용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이와함께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유리병, 페타이어등 수익성이 없어서 민간부문에서 취급을 기피하고 있는 품목은 한국자원재생공사의 공공재활용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재활용되도록 할 것이다.

〈표 4〉 자원재생공사의 재활용시설 현황

	'93	'97
폐비닐재생 처리시설	3개소(15천톤)	4개소(21천톤)
폐비닐중간 처리시설	-	4개소(14.8천톤)
폐플라스틱 처리시설	-	7개소(42천톤)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	2개소(24천톤)
재활용비축 처리시설	-	1개소(38.9천톤)
폐유리병 처리시설	-	2개소(15천톤)

나. 재활용품 유통구조의 선진화

(1) 폐자원 수급조정 기능의 강화

폐자원은 발생량에는 비교적 변화가 크지 않으나, 수요는 국제원자재가격 등 시장동향에 민감하여 적체와 품귀현상이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폐자원 시장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는 재활용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때 이를 비축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따라 1997. 7월 경기도 시화공단에 38.9천톤 규모의 재활용품 비축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국 권역별로 9개소의 비축기지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비축기지 운영상황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 등에 적체된 재활용품을 유상매입하기 위한 재활용품 비축용 자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활용품 적체에 따른 관련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조달청의 비축자금도 1998년 390억 원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 재활용품 유통정보 체계 강화

재활용품은 일반원료와 달리 발생원이 많을 뿐 아니라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수집 및 유통과정이 복잡하고 유통마진에 따른 비용상승 요인도 크다. 따라서 발생자와 수요자를 직접 연결할 경우에는 유통비용이 줄어들므로 재활용의 경제성이 더욱 향상될 것이다.

이에따라 1992.10월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재활용품유통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유통정보센터에서는 산업폐기물, 건설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수집처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요처와 공급처를 직접 연결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인터넷 등 공중통신망을 활용한 재활용정보제공도 확대할 것이다.

(3) 재활용시장 동향조사 실시

재활용품의 종류별, 유통단계별로 가격변화 및 생산, 재고량 등 시장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는 동향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재활용품의 수집상→중간상→재생업체→재활용제품에 이르는 재활용 유통현황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업계의 경영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정부에서도 비축 등 장단기 정책수립에 활용할 것이다.

다. 재활용산업의 경쟁력 강화

재활용산업이 건전하게 육성되어야 재활용 전과정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재활용산업에 대하여는 금융, 세제 및 부지지원 등을 실시하여 육성하고 있다.

(1) 금융·세제·부지지원의 확대

재활용산업은 관련업체가 영세함에 따라 자금이 부족하여 기술개발이나 새로운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1994년부터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을 조성하여 재활용업체의 시설투자 및 기술개발자금을 용자지원하고 있다. 자금규모는 1994년 100억원에서 1998년에는 480억원으로 증가하였다.

〈표 5〉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추이

(단위 : 억원)

년 도	'94	'95	'96	'97	'98
지원액	100	190	300	450	480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의 규모가 증가하였으나, 이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해마다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업체의 1/3 수준만을 지원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재활용업체의 신규 시설투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크다.

이와함께 공업발전기금, 에너지이용 합리화기금,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 등 관련부처의 산업지원기금에서 재활용산업에 대하여 지원되는 자금도 확대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재활용업체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우선 폐지, 고철 등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부과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있다. 또한 재활용업체가 재활용시설에 투자할 경우에는 소득세(법인세)을 공제받거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하여 시설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 재활용하기 어려운 재활용기계, 기구를 수입할 경우에는 관세도 감면하여 주고 있다.

재활용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부지난 완화를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준농림지역 및 건축법상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내에 재활용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재활용제품제조업을 현지근린공장에 포함시켜 수도권외의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 및 자연보전 지역내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개발제한 구역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품 집하 선별장 및 건축폐기물 재활용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앞으로 전국 재활용폐기물의 56%가 발생하나 물류비용 및 부지확보난이 심각한 수도권에 수도권매립지 1공구 부지를 활용하여 재활용종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재활용종합단지의 성과를 보아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등 권역별로 매립이 종료된 매립지를 활용하여 재활용종합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종합단지를 건설할 경우 재활용품의 유통 및 처리가 업체 사이에 유기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재활용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재활용업체의 창업지원

자원재생공사에 '재활용산업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신규 재활용업체의 시장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활용산업창업지원센터는 기술의 경제성 여부, 폐자원 확보방법, 부지확보 및 거래선 알선 등 제반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이며, 지자체와 재활용업체간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도모하기 위한 중개기능도 담당할 것이다.

라. 재활용제품에 대한 소비확대

(1)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의무구매 확대

재활용된 제품의 소비가 늘어야 재활용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소비확대 시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인 등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재활용제품을 의무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1994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에 따라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구매사용 실적은 크게 증가하였다.

〈표 6〉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구매실적

		'94	'95	'96
대상기관(개소)		94	90	114
구매액 (백만원)	총구매액	43,807	46,158	52,583
	재활용품구매액	13,000	38,360	48,428
	구매비율(%)	30	83	92

우선구매 품목으로는 1997. 5월 화장지, 노트, 전자복사용지등 13개 품목을 지정하고, 1998. 5월에는 연소재벽돌, 재생고무블럭, 배수로 등 건설용자재를 포함하여 31개 품목으로 확대하였다. 이와함께 우선구매대상 공공기관도 1994년 94개 기관에서 1996년에는 114개 기관으로 확대하였다. 앞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기관, 채투자기관, 출연기관 등을 포함하여 400여개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활용제품의 품질을 국가가 공인함으로써 우수 재활용제품에 대한 판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1997. 5월 우수 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GR마크)를 도입 시행하였다.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품목 선정시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 판매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2) 재활용제품 판매망의 확충

일반 국민들이 재활용제품을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백화점에 대하여 재활용제품 교환·판매매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재활용제품 상설전시관을 마련하여 재활용제품의 홍보 및 판매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 재활용제품 교환·판매매장 설치 의무 사업장을 백화점 외에 도매센터, 쇼핑센터, 대형점등 모든 대규모 점포로 확대하여 교환·판매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 및 민간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센터내에 재활용제품 판매코너를 설치하도록 하고 동시에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제품 상설판매장이 확대되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우수 재활용제품 및 재활용시설·장비를 전시하는 재활용 산업전시회도 앞으로는 지방을 순회하여 재활용기술 확산, 제품홍보 및 재활용산업의 이미지 제고를 도모해 나갈 것이다.

마. 재활용 관련 제도의 개선

(1) 폐기물예치금제도의 개선·보완

폐기물예치금제도는 폐기물의 회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제품·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매년 정부에 예치토록 하고 회수·처리실적에 따라 그 금액을 반환하는 제도로서 1992년에 도입하였다. 이는 제품 및 용기류의 생산자는 폐기물 발생의 원인자로서의 책임이 있으므로, 회수·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인 경우에는 재활용을 적극 추진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종이팩, 금속캔, 타이어, 윤활유 등 6개품목 12개종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예치금 부과 초기인 1993년에는 반환율이 10% 미만이었으나, 회수·처리 체계가 점차 구축됨에 따라 반환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가 1997년에는 31.9%의 반환율을 보였다. 품목별로는 금속캔, PET병, 전지 등의 반환율이 높다.

〈표 7〉 예치금 부과 및 반환실적

(단위 : 백만원, %)

	'93	'94	'95	'96	'97
부과액	28,425	30,266	32,339	34,016	42,889
반환액	2,230	2,614	4,437	9,970	13,663
반환율(%)	7.8	8.6	13.7	29.3	31.9

〈표 8〉 품목별 부과, 납부 및 반환 현황

(단위 : 백만원, %)

	계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PET	전지	타이어	윤활유	가전제품	부탄가스
부과액	42,889	1,644	7,175	5,057	8,082	657	2,912	1,756	14,494	1,112
반환액	13,663	138	6,900	1,531	3,607	902	19	373	1,209	-
반환율	31.9	8.4	82.0	30.3	44.6	137.3	0.7	21.2	8.3	-

예치금 반환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예치요율이 실회수·처리비의 30% 수준에 불과하여 생산자가 재활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유인효과가 적기 때문이다. 예치금 부과대상이 제한되어 재활용가능한 폐기물이 소각이나 매립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이에 따라 예치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첫째, 예치금 부과요율을 단계적으로 실회수·처리비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이는 업계의 부담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나갈 것이다. 둘째, 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가능성을 감안하여 예치금 적용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예치금 부과에 따른 납부자의 부담을 줄이고 재활용에 대한 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회수·처리체계가 확립되고 예치금반환율이 90%이상인 품목에 대하여는 예치금부과를 면제하는 졸업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졸업한 제품이라도 회수·처리율이 하락할 경우 다시 예치금을 부과하도록함으로써 재활용 노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다.

(2) 폐자원의 원료사용 확대

폐자원을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종이제조업자(폐지), 유리용기제조업자(폐유리), 제철 및 제강(폐철캔), 플라스틱제품(폐플라스틱) 제조업은 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폐자원을 원료로 사용하도록 1993년 시행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서 이용목표율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1993년 이후 3단계로 이용목표율을 상향조정하여 지금은 1998년 이후 적용되는 이용목표율이 시행되고 있다.

〈표 9〉 폐자원 이용 목표율(%)

품 목	'95까지	'97까지	'98 이후	비고('92)
폐 지	47	50	55	44
폐 유 리	42	47	52	42
폐플라스틱	5	10	20	-
폐 철 캔	20	30	40	8

재활용지정 사업자는 폐기물을 발생하게 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오염원인자임과 동시에 당해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지정사업자의 재활용 노력은 가장 효율적으로 재활용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따라서 앞으로 2002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이용목표율을 설정함으로써 폐자원 원료에 대한 수요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와함께 지정사업자의 폐자원 원료사용에 대한 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재활용 지정사업자 제도의 도입, 무주석 또는 저주석 캔(TFS) 개발, 혼합 폐플라스틱 열원이용, 유리병의 매립지 차수막자재 활용 등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3) 재활용이 용이한 구조 및 재질 개선

자동차 및 가전제품(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은 제1종 지정제품으로 제품의 특성, 경제성 및 국내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제품 생산 초기단계부터 재활용이 용이한 구조·재질로 전환되도록 제품설계시 사전평가제 도입하였다. 향후 생산량 확대 등을 감안하여, 컴퓨터, 오디오, 복사기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4) 공동주택의 불박이장 설치 확대

대형가구 폐기물의 감량화 및 목재수요량 감소를 위하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 불박이장 설치 확대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원래 대형가구류는 고장등이 거의 없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도시화에 따른 공동주택화 경향, 임대차에 의한 잦은 이사, 가구패션 변화 및 과소비 등으로 연간 약 97만점(장롱 188천점 포함)이 폐기되고 있다. 이중 약 78.4%가 플라스틱 칩합, 도색 등이 되어 재활용되지 못하고 단순매립되는 실정이다. 특히 1997. 7월 폐기물관리법령이 개정되어 2001년부터 대형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대형폐기물의 감량화 시책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신규주택의 90%를 차지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큰방(침실) 등에 불박이장 설치를 단계적으로 유도함으로써 대형가구 폐기물의 원천적인 감량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아직 일부 국민은 가구류를 수납개념이 아닌 정서적 대상 또는 부의 과시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있으므로 공청회 등을 통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하여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 시기와 방법을 조정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앞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규정의 개정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다.

(5) 생산자 자율 재활용체계의 도입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산자자율 재활용체계의 도입을 추진할 것이다. 생산자자율 재활용체계는 확대생산자책임(EPR) 개념을 도입한 제도로서 생산자에게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일정비율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되, 방법은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생산자는 재활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담기업에 참여하거나 독자적인 재활용체계를 구축하여 정부가 설정한 재활용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 이는 재질, 조립·해체의 용이성 등 제품의 재활용 가능성을 결정하는데 생산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므로 이들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OECD 각국에서 도입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생산자자율재활용체계를 도입할 경우 정부, 지자체, 소비자 및 생산자는 재활용에 관한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게 된다. 즉, 정부는 생산자에게 의무재활용율을 부과하고, 의무를 달성여부, 재활용전담기업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실시하고, 지자체는 소비자가 분리배출한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재활용을 책임지는 생산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소비자는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

생산자는 자체 재활용체계를 구축하거나, 재활용 사업자단체에 가입하여 지자체가 공급한 재활용품을 처리하여야 한다. 재활용을 담당하는 전담기업의 운영비는 재활용마크 사용료로

조달하며, 동 사용료는 재활용의 경제성, 난이도 등에 따라 차등부과된다.

5. 결 어

IMF체제 이후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량이 줄어들고, 환율폭등 및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폐자원의 경제적가치가 상승하여 재활용산업 만큼은 장기침체에서 벗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재활용기반의 성숙이라는 내부적 요인이 아닌 외부적 여건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를 지속시키기 위하여는 특별한 정책적인 노력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자원이 부족하고, 환경이 악화되는 21세기를 대비하여 재활용 실천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정착되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재활용 기본체계의 재정비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시점이다.

발생된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저비용·고효율의 자원순환체계 구축은 정부·기업·국민의 합리적 역할 분담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는 강력한 매립·소각 억제정책과 실질적 프로그램 마련하여야 하며, 민간기업은 재활용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은 근검절약 및 환경보호정신으로 철저한 분리수거를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21세기 무한경쟁 속에서 좁은 국토와 빈약한 부존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폐기물도 자원으로써 소중히하는 사회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자원순환형 선진환경국가로 진입하는 것이 환경정책의 기반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